

2014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일시 | 2014. 7. 8. [화] 14:00-15:3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 일시: 2014. 7. 8.(화) 14: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50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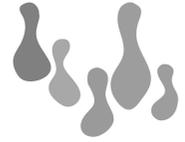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이정림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4:50~15:20 지정토론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20~15:3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2014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



발표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이정림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¹⁾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 증진의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최근의 맞벌이 가정, 이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 소득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한 국가차원에서의 보다 체계화된 공적 개입이 더욱 절실해진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결손·해체 가정의 증가로 방임·방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과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이러한 정책기조는 잘 맞물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아동돌봄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관 간 ‘간막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동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아동돌봄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동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 중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도 통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부처가 추진 중인 아동돌봄사업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수요가 큰 중산층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가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부처별 통합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중복성 및 사각지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처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서비스 협력과 정보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연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아동복지 관련 다부처 정책의 중복성 및 사각

1) 본고는 201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행한 이정림·정주영·정익중·조혜주의 수시협동연구 보고서의 ‘다부처관련 정책 현황 조사: 아동돌봄서비스’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지대 가능성의 세부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중심 정책·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돌봄서비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보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돌봄으로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은 서비스 대상과 내용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6개 사업에서 여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6개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현황 및 수요자 요구 파악을 통하여 부처별 아동 돌봄서비스 중복 및 비효율성을 평가하고 돌봄서비스 대상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처 간 돌봄서비스 지속적 확대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통합 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국내의 문헌연구를 통해 4개 부처별(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현황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 4개국의 방과후 사업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사업별 담당공무원, 기관 실무진,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 1> 과 <표 2>에서 심층면접 대상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 심층면담 대상자

구분	사업명	대상자
1	초등돌봄교실(서울시 P구, 7명)	돌봄교사 2명
		돌봄이용부모 2명, 돌봄이용아동 2명
		돌봄교실 담당 장학사 1명
2	지역아동센터(서울시 M구, 9명)	센터장 1명, 센터교사 2명
		센터이용부모 2명, 센터이용아동 2명
		지역아동센터 담당 공무원 1명, 사회복지사 1명
3	드림스타트(P시 A구, 7명)	드림스타트센터 실무진 3명
		드림스타트센터 이용 부모 2명
		드림스타트센터 이용 아동 2명
4	아이돌봄지원사업(서울시 S구, 5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진 1명
		아이돌봄 교사 2명 아이돌봄 이용 부모 2명
5	문화예술 돌봄 및 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진흥원, 3명)	담당공무원 1명
		문화예술진흥원 담당자 2명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구분	사업명	대상자
1	방과후 아카데미(서울,경기지역, 5명)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II.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돌봄 및 교육활성화 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성과가 유사한 사업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로 구분하고 문화예술돌봄과 아이돌봄은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 급식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공간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지원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4학년에서 중등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들에 의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각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2013년 아동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구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초등1학년~3학년 (고학년 일부)	초등4학년~중등2학년
지원 내용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보호, 교육 및 일부 급식지원	체험 및 특기적성 교육, 급식지원 등
지원 시설 수	3,742개소 (설치는 4,036개소)	7,400교실	200개소
지원 예산	국비 : 1,246억원 지방비 : 1,189억원	국비 : 5억원 지방비 : 3,318억원	국비 : 161억원 지방비 : 169억원
지원 형태	전액지원	수익자부담 저소득층 정부지원	지원형 : 전액지원 일반형 : 수익자부담
운영 주체	개인 및 법인 등 민간, 지자체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아동	108천명	160천명	8천명
근거법	아동복지법 제52, 59조	초중등교육과정 고시 2009-41호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1. 부처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부처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정책 현황에 관하여 관련 사업 실태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등의 문헌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파악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에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현황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8항).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로서 접근이 용이하고, 아동의 권리보호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드림스타트, 읍면동 포함)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 맞벌이, 이혼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발굴, 보호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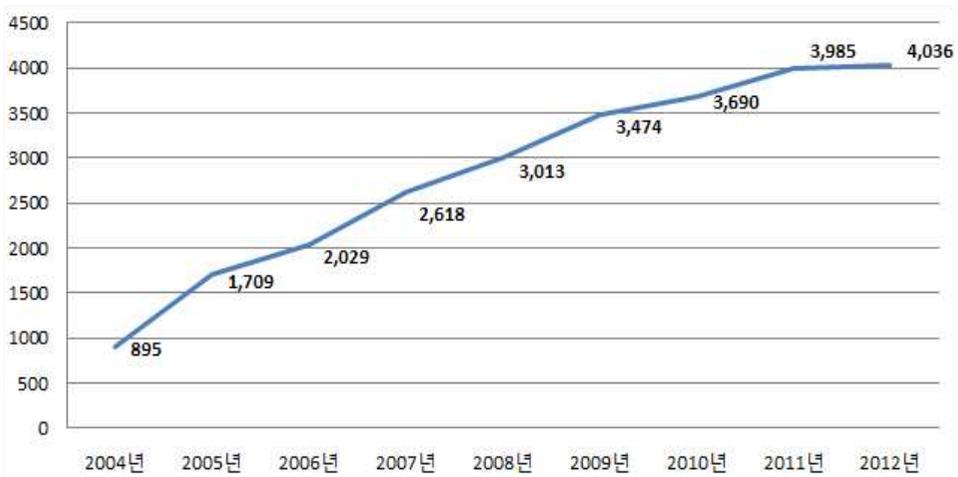
<표 4> 지역아동센터 추진도

추진체계		기능 및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델 개발 및 보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실적관리 아동복지교사 실적관리 및 교육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사업조정, 평가 등 총괄운영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아동센터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시도	담당부서	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등 시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추진체계	기능 및 역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도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시도 종사자 인력 교육 실행 시도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시도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정보관리, 데이터 관리 운영 시도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등 시도 지역아동센터 민간자원 개발, 연계 지원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 수립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 및 확인 아동복지교사 파견관리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예산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지자체 협조 등

출처: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p.5

2012년 12월에 발표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2년 4036개소로 약 4.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8,357명 중 미취학 아동은 4,028명(남아 2,063명, 여아 1,965명)이고, 초등학생은 80,426명, 중학생은 20,017명, 고등학생은 3,663명 등이다.



출처: 2012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p. 18,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그림 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 드림스타트센터 현황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드림스타트 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발달상태와 가계형편을 고려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타 기관과의 연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5〉 드림스타트센터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대상	0~12세 저소득 아동(수급자 및 차상위(120%)) 및 가족, 임산부 ※ '10년 101개 지역 아동 33천명(22천 가구) → '11년 131개 지역 아동 45천명(30천가구)
추진체계	시군구별 드림스타트센터(전담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 등을 통한 상담 후 위험정도에 따라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기적 점검(고위기 1월, 중위기 3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 실시 (50,786명 33,353가정, '12.6월 현재)
사업지역	'12년 현재 181개 시.군.구에서 실시, 시.군.구 내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07년 16→'08년 32→'09년 75→'10년 101→'11년 131→'12년 181개 시.군.구
사업예산	시군구별 3억원(국비 100%, 서울은 2억(67%)) ※ '07년 48억→'08년 96억→'09년 223억→'10년 301억→'11년 372억→'12년 462억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드림스타트 센터의 수행인력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드림스타트센터 구성 및 주요업무

구분	구성		전문 영역	주요업무	공통업무
	공무원	민간			
팀장	1인 (6급이하 공무원)		행정, 사회복지, 간호(보건)	-빈곤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제공총과 -서비스 기획, 조정 및 예산관리 -지역 보건복지 자원발굴, 연계	통합사례 관리 및
건강 담당	1인	1인	간호 (보건)	-건강, 영양 등 방문보건서비스 지원 -지역 내 보건 연계망 구축 -의료 개입 및 응급 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아동학대 발견
복지 담당	1인	1인	사회 복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및 학교연계프로그램 관리	신고의무

구분	구성		전문 영역	주요업무	공통업무
	공무원	민간			
보육 (교육) 담당	1인	1인	보육, 교육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정방문 조기교육, 수행/관리	
아동 복지 교사 관리		지역 사회 복지사 1인	사회 복지	-아동복지교사 배정, 노무관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사례관리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지역 아동센터로의 연계 및 관리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간 연계업무 지원 등	

출처: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33.

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목적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 돌봄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저학년생(초등 1~3학년)을 주요대상으로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방비 확보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기, 시간에 따라 일반돌봄교실과 엄마품은종일돌봄교실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7>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2013년 4월 기준)

구분	운영시기/시간	학교수/교실수	참여학생수
일반돌봄교실	방과후 ~ 18:00	5,807교(98.6%) 7,395실	15.9만명
엄마품은종일돌봄교실	06:30 ~ 22:00	1,459교(24.7%) 1,927실	3.9만명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

초등돌봄교실의 사업수행기관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이고, 단위학교별로 돌봄교실 수요를 파악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현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앙과 지방 및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초등 4~중2)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특기적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세부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와 부모의 실직·파산·장애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나홀로 초등 4학년~중등 2학년 청소년
운영장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방과후아카데미로 지정 운영
운영방법	시설당 40명(반당 20명 구성)씩 1일 5시간 내외 운영, 주 6일 운영(토요일 운영), 방학 운영
지원내용	자기주도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캠프, 부모교육, 급식 및 건강 지원, 귀가 지원 등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자녀와 부모의 실직, 파산, 장애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4~6학년, 중등1~2학년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도, 시군구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전체적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전국 운영(평가, 교육, 지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하였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youthacademy.or.kr/new/05_academy/image/05_img01.jpg(검색일:2013.11.24)

[그림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체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본공통과정, 전문선택과정, 체험학습과정, 생활지원 등 활동프로그램 중심으로 각 책임운영기관(청소년 수련시설)별로 지역적 특성과 참여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표준 운영프로그램

구분	전문체험 활동과정영역	학습지원 활동	자율체험 활동	특별지원 과정	생활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 탐구 -세계, 시민 -인성 및 기타	-주요교과목지원 -자기주도과정	-정기 자율 활동 -토요 재량 활동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 등

출처: <http://www.youthacademy.or.kr/>(검색일:2013.11.30)

2)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추진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2012.2.1.공포) 제4조(국가 등의 지원)와 제20조(비용의 지원 등)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부모 등의 자녀를 집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로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의 자녀이고, 시간제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자이고, 종일제서비스는 0세(만12개월까지)이하이다.

<표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소득 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시간당) 단가: 시간당 5천원		종일제(월 200시간) 단가: 월 100만원	
	정부지원	부모부담	정부지원	부모부담
가형: 50%이하(237만원)	4,000원	1,000원	70만원	30만원
나형: 70%이하(332만원)	2,000원	3,000원	60만원	40만원
다형: 100%이하(474만원)	1,000원	4,000원	50만원	50만원
라형: 100%초과	-	5,000원	40만원	60만원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계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가구 평균 50% 이하(208만원) 20,629가구(54.4%)에서 사용하였고, 50~100%(208만원~416만원) 8,529가구(22.5%), 100% 초과(416만원) 8,776가구(23.1%)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연령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표 11>과 같다.

구 분	합계	성별		연령별			
		남	여	0~2세	3~5세	6~8세	9~12세
아동수	53,827	28,890	24,937	23,959	18,115	8,517	3,236
비율	100	53.7	46.3	44.5	33.7	15.8	6.0

<표 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1년 말 기준)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아이돌보미교사는 주로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육아경험이 있는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고, 90시간의 교육(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 기본계획 및 지침 마련, 예산 확보 및 지원,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시·도 (시·군·구)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예산집행 및 실적 보고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감독 등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지(시·군·구 수행)
읍·면·동	○ 서비스 이용 안내, 신청서 접수, 가족상황·소득 등 조사
서비스제공 기관 양성교육기 관	○ 아이돌보미 채용(면접 등) 및 급여지급 등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아이돌보미 파견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양성교육기관)
사업 지원기관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교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 평가 지원,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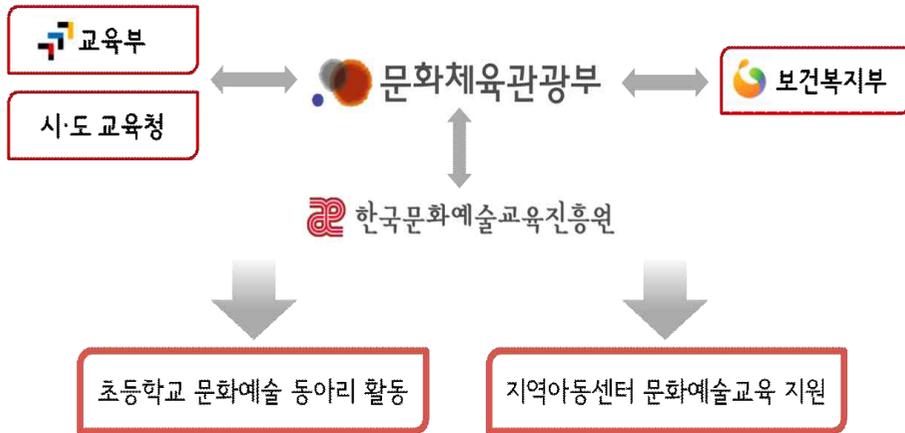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그림 3]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돌봄 현황

문체부의 문화예술돌봄 사업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아동의 창의성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 체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소외 지역 및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아동돌봄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돌봄은 지역아동센터로 예술강사(예체능)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4년부터 초등돌봄교실에 예

술강사 파견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나, 아직 예산 배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예술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수혜 대상 및 예산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표 12>에 제시하였다.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그림 4] 문화예술돌봄 지원 사업 절차

<표 12> 문화예술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학교·지역아동센터 등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아동의 창의성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 체득 기회 제공,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아동 돌봄 기능 제공				
사업내용	방과후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초중고 대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13년 7,254개교 4,485명 강사) 외에 '방과후 동아리활동(초등학교)' 을 추가 지원 계획('14년 이후 300개, 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자녀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 (현행) '13년 351개 지역아동센터, 436개 프로그램 지원 → '14년 450개 센터				
사업대상 및 예산	사업구분	예산(백만원)	수혜시설수	수혜반수	예술강사(명)
	2012	903	152	229	214
	2013	1,700	351	436	225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함.

2.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 관련 사업 자료 분석을 포함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업 대상자,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및 집단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돌봄서비스 사업들간의 중복혜택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각지대 현황 및 현황, 마지막으로 면담 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기타 주요 현황 및 문제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 중복혜택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중복혜택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은 대상자들 대부분 저소득층, 기초수급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이 중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방식에 의해 기초수급층의 아동돌봄서비스 중복혜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소득 수급계층의 아동은 실질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는 매일 상시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센터의 프로그램은 매일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중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이 있어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심층면담에서 만난 드림스타트 센터 이용 부모는 자녀 한 명당 2개 이상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평상시(월~금,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에는 양 기관과 조정해서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 작업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개 이상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드림스타트 센터 면담 학부모1: 애가 공부마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으면 그 시간까지는 거기 있다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고 해서 방과후 수업을 뺐어요. 빠니까 학교에서 왜 방과후 수업을 안 하느냐 이런 혜택이 있는데 방과후 수업 40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한 30분 그러면 40분 그러면 어영부영 한 시간 그러면 그 40분을 받기 위해서 2시간이 되더라고요. 2시간을 지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밥 먹고 오는 거 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다른 기관(특히 방과후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갔다가 저녁시간에 지역아동센터로 오는 것은 반대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고, 아이들이 와서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격이 되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저희도 방과후 학교나 초등돌봄 시간대에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어요. 영어 미술 이렇게 시간대가 되어 있는데 늦게 오면 우리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가 너무 뒤쳐져서 선생님이 한 시간 정도 봐주겠다 그런 아이들만 오케이하고 학교에 방과후에 따로 신청하거나 프로그램 신청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둘다 참석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둘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와 드림스타트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 사업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월~토 오후시간에 상시적인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P시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진행된 학부모 면담결과, 기초수급계층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것이 혜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모두 중복이라는 견해이고, 수급계층 중에서도 맞벌이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기초수급계층 아동 중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센터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원2: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랑 지역아동센터랑 드림스타트센터랑 세 개를 다 이용하시는 거네요?

학부모2: 그렇죠. 내가 서로서로 편리하게 그래야 있으면 여기서 거기 간다고 해서 드림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다 연계돼 있는 상태에서 중복 안 되고 피해를 안 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지금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주중에 하루 4시간 이상 매일 제공되는 아동돌봄서비스(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간 시간대별 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2012년 7,086개실에서 2013년 7,400개실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초등돌봄의 시간대별 이용자수를 서울 P구 현황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과후 18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76%이고, 아침돌봄만 이용하는 아동까지 합하면 총 92%의 아동이 오후 6시면 귀가하고 있음.
- 방과후 19시까지 이용하는 아동을 합하면, 97.9%로 2.1%의 아동을 제외하고 오후 7시면 모두 귀가하였음.
- 밤 10시까지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없음.

<표 13> 초등돌봄교실 이용현황(서울 P구)

이용 시간대	아침 돌봄만 이용	방과후~ 17시까지 이용	18시 까지 이용	19시 까지 이용	20시 까지 이용	21시 까지 이용	22시 까지 이용	계
아동수	337명 (16.0%)	1360명 (64.7%)	237명 (11.3%)	126명 (5.9%)	39명 (2.0%)	2명 (0.1%)	0명 (0.0%)	2101명

출처: 서울 P구의 초등돌봄교실 이용현황 자료.

서울시 P구의 한 초등돌봄교실에서 실시된 심층면담결과, 초등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동정서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1~2명 남는 아동을 위해 전담인력1명, 관리자1명, 경비인1명이 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비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동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교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초등학교 교실에서 생활하면 아동들이 학교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등돌봄교실 담당 부장교사: 저는 우선 엄마의 입장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오랫동안 남는 거 자체를 반대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저희 학교도 아침 돌봄도 있고 저녁 돌봄도 있는데 아이들이 세끼 다 학교에서 밥을 먹고 집에선 잠만 자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의 정서 상태를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데 아동들 자체도 학교에 있는 걸 싫어해요.

넷째, 주중에 매일 4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아동돌봄서비스(초등돌봄,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간 연령별 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돌봄서비스 중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의 연령별 이용아동수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돌봄교실의 연령대별 이용아동수는 전국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나, 한

교실 당 20명씩 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위주로 혼합연령반을 구성되기도 하고, 초등돌봄교실의 규모가 크고 시설이 충분한 초등학교에서는 단일연령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연령대별 이용아동은 초등학교생이 74.2%, 중학생이 18.5%, 고등학생이 3.4%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초등1~3학년)은 35.1%, 고학년(초등4~6학년)은 39.1%로 초등학교학년이 조금 많은 편이다.

방과후아카데미의 연령대별 이용아동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초등4~6학년)이 75.7%이고, 중학교1,2학년은 24.2%로 초등학교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수련관의 특성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고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교사들은 방과후아카데미의 특성상 초등 고학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중학생 이상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표 14>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연령대

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 이용연령대	초등저학년 35.1%(38,030명) 초등고학년 39.1%(42,396명)	초등4학년 17.9%(1,450명) 초등5학년 32.1%(2,590명) 초등6학년 25.7%(2,070명)
기타 이용연령대	미취학 3.7%, 중학생 18.5% 고등학생 3.4%, 탈학교 0.2%	중등1학년 13.6%(1,096명) 중등2학년 10.6%(854명)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

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아동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정작 돌봄이 시급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한 근거법의 수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표 15> 아동돌봄사업 적용 법

사업명	적용대상	관련 법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저학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초중등교육과정고시 2009-41호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만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16조, 31조
방과후 아카데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등4~중2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드림스타트센터	0~12세 저소득 아동	아동복지법 제37조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교사와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와의 심층 면담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 수급계층의 경우에는 여러 교육복지와 관련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아동돌봄서비스도, 사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둘째, 드림스타트 센터의 사례발굴업무를 강화하여 수급계층 중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 센터의 전담인력과 심층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센터의 업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급계층 중에서도 아동돌봄서비스의 종류나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급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센터 등의 협조와 연계없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셋째, 수급계층 아동 중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방과후에 소외되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돌봄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중 중학생 이상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 16> 지역아동센터의 중학생 수, 비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학생	6,846 (11.6%)	9,224 (12.1%)	11,380 (13%)	13,600 (13.9%)	15,075 (15%)	17,374 (16.5%)	20,017 (18.5%)
고등 학생	1,095 (1.9%)	1,413 (1.9%)	1,862 (2.1%)	2,072 (2.1%)	2,346 (2.3%)	3,014 (2.9%)	3,663 (3.4%)

출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방안(2012). 관계부처 합동 자료집 중 발췌 수정

드림스타트센터 이용 학부모와의 심층 면담결과,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수급계층의 중학생 이상 아동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졸업한 후 현재의 아동돌봄서비스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걱정하고 있었다.

다. 기타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아동돌봄서비스를 총괄한 리플렛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의 적극적인 아동돌봄서비스 홍보가 요구된다. 서울시 P구의 아동돌봄 담당 장학사와의 심층 면담결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아동돌봄서비스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서울 P구의 경우 지역에서 필요한 가정이나 아동

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었다.

일반 주민 또는 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의 학부모들은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드림스타트 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주민 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서비스를 안내해주었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여성부 차원에서의 홍보가 폭넓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이 받는 아동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로 명칭이 달라서 비슷한 대상과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명칭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의 면담결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스스로를 학원에 다닌다고 소개, 센터장에게도 원장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의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총칭할 수 있는 용어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통일은 낙인효과 제거하고 통합된 아동돌봄서비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교 NEIS 기록을 통해 방과후 아동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 있다. 방과후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의 경우, 전국단위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학교 담임을 통한 수요조사 방식이고, 이를 NEIS에 기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강제하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초등돌봄교실 담당 교사와의 심층 면담결과에서도 학교를 통한 수요파악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방과후 아동현황 조사가 아니라 방과후 아동의 시간대별 현황을 조사하고, 보호자에게 언제 인도되는지까지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및 전담인력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중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드림스타트 센터 전담인력과 심층면담에서도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과후 아동 지원이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 및 아동돌봄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부실기관 및 프로그램의 퇴출, 기관 평가 시스템 제고 등이 요구된다. 우선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별 평가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아동돌봄서비스 각 사업별 평가시스템

사업	평가시스템
초등돌봄교실	1.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전체 초등돌봄교실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7월, 12월) 실시함. 주관은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며, 최종결과는 교육부에서 관리함. 2. 초등돌봄교실 컨설팅 실시 -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컨설팅 실시함. 주관은 지역교육청이 담당함.
지역아동센터	1. 신규센터 컨설팅 실시 - 시도지원단이 6개월 이내에 신규센터에 대한 운영 컨설팅 실행 후 결과를 중앙지원단에 통보함. - 진입, 심화평가 결과 non-pass, 미흡센터 (60-69점) 대상으로 함. 컨설팅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함. 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항목 포함 - 평가계획 내용: 목표달성도, 사업수행과정상 효율성 관리 3. 운영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1인, 시설장 추천 시군구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5-10명 이내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함. - 심의사항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여한 사항
드림스타트	1. 각 센터별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 평가서 작성 2. 서면평가 - 시도담당자가 각센터 자체평가서 받아 취합후 검토함. 해당 행정구역 내 시·군·구 센터 현장점검함. - 시도 담당자는 타 시·군·구 센터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 교차평가 - 평가단 및 사업지원단이 센터별 사례에 대한 질적확인 및 점검 2. 실사평가 - 평가단 및 사업지원단이 센터 대표 면접 및 컨설팅
방과후 아카데미	1. 자체평가: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에 평가계획 포함하여 수립 -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 ◦평가목적, 평가영역 및 준거, 평가지표 및 도구개발, 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협의 및 평가적 판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외부평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평가 및 컨설팅 실시

사업	평가시스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각 사업 실행기관에서 사업만족도 조사, 실적 작성후 광역거점기관에 보고함. 광역거점기관은 각 사업 실적을 중앙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함. 중앙사업지원기관에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를 함.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음.
문화예술 돌봄 및 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교육활동을 매년 9-10월 중 실시함. 예술강사 수혜대상 기관 담당자, 수혜자 대상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함.

아동돌봄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각 사업별 교사 및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결과, 전체적으로 처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고용형태의 불안정에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초등돌봄보조사'라는 명칭에 자존감이 상실되고, 경력이 쌓이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급 인상을, 드림스타트센터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의 전환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교사로서의 지위확보와 월급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

셋째, 취학 전 영유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현재 여성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취업부모 등의 자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비용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뉜다. 아이돌보미 사업 중시간제 돌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전후, 부모의 출장·야근 등에 의한 일시적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0세(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안전 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월 40~70만원 지원(이용단가 월 100만원)받을 수 있고, 월 200시간(1일 10시간)까지 지원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취업준비 등)의 자녀로 요구 가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 소결

우리나라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은 부처 간 소통의 부족과 행정체계, 법체계의 틈으로 인해 각종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심층면담과 자료분석을 통한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의 중복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은 대상자들 대부분 저소득층, 기초수급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방식에 의해 기초수급층의 아동돌봄서비스 중복혜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와 드림스타트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사업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주중에 하루 4시간 이상 매일 제공되는 아동돌봄서비스(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간 시간대별 중복과 연령별 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다.

법적·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파악해본 결과, 우선 아동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정작 돌봄이 시급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한 근거법의 수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드림스타트 센터의 사례발굴업무를 강화하여 수급계층 중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여야 한다. 비수급 빈곤계층 아동 중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방과후에 소외되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돌봄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중 중학생 이상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상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먼저 아동돌봄서비스를 총괄한 리플렛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의 적극적인 아동돌봄서비스 홍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이 받는 아동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로 명칭이 달라서 비슷한 대상과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명칭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총칭할 수 있는 용어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통일은 낙인효과 제거하고 통합된 아동돌봄서비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 및 아동돌봄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부실기관 및 프로그램의 퇴출, 기관 평가 시스템 제고 등이 요구된다.

III. 외국의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아동돌봄서비스에 관한 국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의 아동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다음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의 아동돌봄서비스

미국, 스웨덴, 영국 및 일본의 방과후 아동서비스관련법, 예산지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방과후 서비스에 있어서 유사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네 국가(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모두 방과후 서비스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있고,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가 통합되거나 강한 연계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다. 하나의 정부부처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 통합된 전달체계 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세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정익중 외, 2013).

<표 18> 방과후 서비스 국가별 비교

	미 국	스 웨 덴	영국	일 본	한 국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주별방과후아동 보육관련 규정	교육법	교육법	아동복지법	법률안 없음 법적 근거 없음
정부 예산 지원	정부 예산지원함 반은 학부모부담	정부 예산지원함 극히일부 학부모부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함 일부 학부모 부담	정부 예산지원함 일부 학부모부담	정부예산 일부지원함 수요자 부담 및 일부학부모부담
전달 체계	중앙: 연방교육부 프로그램 주: 주교육부 민간조직: 협동운영조직, 전문지원 및 연구기관, 방과후 아동보육 연맹, 민간	중앙: 청소년, 가족, 여성, 보건부의 보건사회정책국 지방: 교육위원회 (아동보육실행 책임)	지자체의 아동서비스부: 교육과 아동서비스의 상호연계	중앙: 후생노동성 (아동복지가정국) 지방: 도도부현 (보육소인가, 지도, 감독) 시정촌 (보육소일선행정)	중앙: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 시도교육청지원 지자체일부지원
공통점	방과후 보육 및 돌봄서비스 관련 전담	부서는 통일되어	있음 (지자체 중심)	교육부	
차이점	교육부 담당 미국은 민간개입이 가장 적극적	교육부 담당 국가개입이 가장 적극적임	재정지원은 중앙정부,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자체 중심	복지부 관련 부서 담당 (지자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과후 보육 시설	초등학교 각종 종교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민간인주도시설 등	주로 학교시설	핵심서비스는 학교시설 이용, 부가서비스는 지역사회 상황 고려	방과후 보육시설 및 아동관 학동보육센터, 학교부지전용시 설보육소, 유치원, 문화센터	주로 학교시설 일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출처 : 정익중 외(2013).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p. 127.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방과후 서비스의 공통적 특징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과 복지의 통합을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연계가 필수 조건이며 관련 부처가 통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방과후 서비스를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고(한국 제외)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방과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과 방향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시사점

영국, 미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방과후 서비스 추진 체제와 방과후 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19> 방과후 서비스 국가별 비교

국가명	지원체제 운영 방식	시사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로 기초 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지원체제이다. ■ 방과후학교 연맹은 미국의 전역에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비영리 기구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 따라 독특한 방과후학교 지원체제의 운영은 다르나 전국 단위로 방과후 학교 활동을 위한 지원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한 시설, 인적자원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기반의 조성 잘 갖추어져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에 의해 방과후학교의 핵심에 보육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레저타임센터에는 양질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규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의 보육 활동은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돌봄 교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돌봄 교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정규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은 연계성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국가명	지원체제 운영 방식	시사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거점으로 ‘학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서비스는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다. ■ 지자체와 연계된 열린학교는 보육서비스와 다양한 활동(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고 일반학생들에게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설정한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맞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는 방과후 활동의 사업의 전반에 대한 골격을 세우고 예산은 중앙 정부, 현(縣),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및 현(縣) 단위의 관리 위원회에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 현(縣) 교육위원회는 행정가, 학교대표, 사회 교육, 복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방과후교실 진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과후 아동」 사업에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까지 하는 것은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 단위에서 방과후학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행정 계통 중심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운영체제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출처 : 정익중 외(2013).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제 연구 p. 128-129. 재구성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네 국가 모두 방과후 서비스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였고 전달체제가 통합되어 단일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 없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교가 모든 방과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방과후 서비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전달체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방과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방과후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과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만 설정해 주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권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있다. 전달체계간의 연계는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화하여 부처 간 역할을 차별화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보다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 업무 및 중복 예산지원을 조정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기구(헤드컨트롤 시스템) 설치해야 한다(정익중 외, 2013).

정부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기관과의 연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기관 간의 체계적인 정보 교환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기관은 정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및 소외계층의 복지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관 및 미신고 시설들과 연계하여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연계협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정익중 외, 2013).

또한 비슷한 기능을 가진 방과후 기관들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우리나라의 방과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공통적 특징은 방과후 서비스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방과후 서비스의 지역아동센터 역시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한 가정해체와 빈곤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이라는 복지 측면을 고려한 방과후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IV.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개선방안

아동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판단된다.

1.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중복 개선방안

가. 개선 방향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돌봄서비스 6개 사업 중에서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와 같은 4개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아이돌보미 사업과 문화예술돌봄 사업은 중복이라 보기 어렵다.

아동돌봄서비스 중복에 대한 개선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4개 사업(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의 이용자 중복, 서비스의 질(제공인력, 프로그램 내용 등) 등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할 하나의 전담 기관이 요구된다. 아동돌봄서비스 중복을 통제하기 위해

서는 아동돌봄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질적 측면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총칭할 수 있는 용어의 통일이 요구된다. 저소득 빈곤층 아동이라는 낙인효과 제거 및 통합된 아동돌봄서비스 이미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방과후센터’라고 제안한다. 이와 같은 아동돌봄서비스 통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통칭 사업 용어에 관한 공모 사업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용어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관 기관으로 기존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 업무를 많이 담당해왔던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 센터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같은 기존의 기관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아동돌봄서비스를 상시적 돌봄과 일시적 돌봄으로 트랙을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상시 이용아동과 일시 이용아동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요구를 지닌 아동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상시적인 돌봄²⁾이 필요한 아동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인 돌봄³⁾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선 방안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중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단기와 중단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 방안은 각 사업별 서비스 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예산과 인력 수준 하에서 사업의 중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중단기 개선 방안은 단기 개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중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 단기 개선 방안

단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기초수급계층의 아동돌봄서비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

2) 상시 돌봄: 최소 3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매일 3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상시 돌봄이라 할 수 있음.

3) 일시 돌봄: 상시 돌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돌봄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데미, 드림스타트) 중복혜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중복 현황 파악 및 중복 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서비스 질적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전담기관이 만들어져서 서비스 중복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들 간의 제공 인력 및 프로그램 내용 관리까지를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사업 중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례관리와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연계기관으로 중점화하는 방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센터의 보건 및 언어/언어 프로그램 업무를 다른 돌봄기관(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으로 인계하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사례관리와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위주 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전담기관에서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모두 소개하는 안내 브로슈어를 제작 및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능한 하나의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사업의 재정지원은 기존의 방식을 따르며, 드림스타트 센터가 통합을 위한 실행 전담 기관이 된다면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단기 개선 방안

중단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합하여 실행하고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서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의 질적 수준이 비슷해진다는 전제하에서 중복해소 방안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연령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연령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계층 이용 대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초등돌봄으로, 고학년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시간대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 가능 시간대와 연동하여 적합한 아동돌봄 기관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6시에 부모가 퇴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초등돌봄으로, 부모가 9시에 퇴근하는 아동은 방과후에 일괄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로 안내하여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가. 개선 방향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사각지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기초수급대상이 아닌 저소득 빈곤층과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필요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일반가정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취업모의 증가로 인한 취학전 영유아의 돌봄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관한 기존 사업의 확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의 대상이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어 영유아 및 중학생 이상의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서비스 미이용 기초수급계층 아동의 사례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하다.

나. 개선 방안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 교육부의 NEIS 시스템 활용을 권장한다. 초중고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방과후 일정에 대한 시간대별 대략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각종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사교육 후 보호자와의 연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돌봄이 시급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아동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익자부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취학 전 영유아의 돌봄에 관한 요구도가 높으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제도의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된다. 영아시기에는 종일 돌봄이, 유아 시기에는 일시 돌봄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영유아에 대한 수요를 지원할 인력 충원은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육아연륜이 있는 사회경력 단절 여성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기초수급계층 중학생 이상 아동 중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방과 후에 소외되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돌봄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

터와 방과후아카데미의 중학생 수용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각종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초수급계층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워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사례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서비스를 총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주민센터, 은행, 각종 돌봄기관에 배포·비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식이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각종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의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아동돌봄서비스 운영모형

가. 아동돌봄서비스 운영모형 기본전제

아동돌봄사업의 중복 및 사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대로 다음에서 드림스타트 센터가 실행주관 기관이 되는 모형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실행주관 기관이 되는 2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아동돌봄서비스 운영모형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전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행정전달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총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부처단위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아동돌봄서비스의 통합지원을 위한 예산 및 각종 정책 사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및 업무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행정체계 협의회 구성은 지역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고, 구청장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협의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돌봄 통합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방과후학교지원센터 or 드림스타트센터 중 선정)를 선정하고 지정하는 역할이다. 또한 컨트롤 타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재원, 인력, 시설 등) 지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지역단위(시도 수준) 컨트롤 타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전국 각 시도단위에서 합의된 18개의 아동돌봄서비스 지역단위 컨트롤 타워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통합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마련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18개 시도의 균등한 아동돌봄서비스 지원과 각종 공통 관리 매뉴얼과 프로그램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아동돌봄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성격을 지니고, 관리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전문인력은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아동돌봄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지역단위 아동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센터를 고려하여 다음의 드림스타트센터 연계 모형(A모형),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연계 모형(B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두 모형 중 어느 형태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드림스타트 센터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 더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지역단위 컨트롤 타워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나.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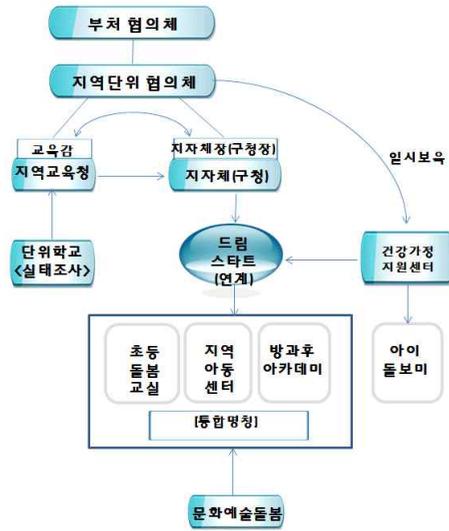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모형은 아동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 연계 모형(A모형)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모형(B모형)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각 모형의 장점과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1) 드림스타트센터 연계 모형

A모형은 드림스타트센터가 아동돌봄서비스 연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모형으로 다음 [그림 5]와 같다.

본 모형의 장점은 첫째,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둘째, 1개 센터 당 연 3억 정도의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본예산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동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와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통해 부모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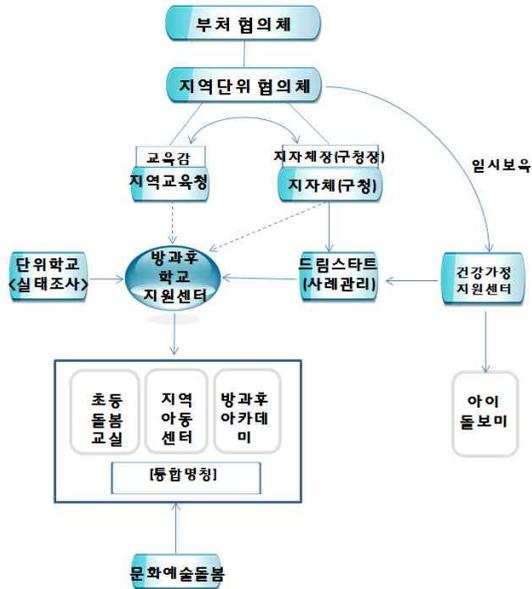
본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과제는 첫째, 지역교육청과의 원활한 정보 및 각종 지원교류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연계사업 이외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내용들을 다른 돌봄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5] 드림스타트센터 연계 모형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연계 모형

B모형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아동돌봄서비스 연계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모형으로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연계 모형

본 모형의 장점은 첫째, 학교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어 실태조사 실시 시 단위학교 교사의 협조를 받기가 좀 더 용이하다. 둘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NEIS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아동돌봄서비스에 교육적 전문지식을 가미하여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모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첫째,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이었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4. 소결

본 연구 대상인 아동돌봄서비스 6개 사업 중에서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와 같은 4개 사업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고 통합명칭을 부여하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사업별 서비스 질적 수준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중복된다고 해서 임의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는 사업별 서비스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며, 중단기적으로 학년(연령)별, 이용시간대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사업별 이용자 현황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센터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사업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인 맞벌이 일반가정의 영유아, 중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 이용자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모형을 아동돌봄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 연계모형(A모형)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모형(B모형)으로 나누어 각 모형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각 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행정전달체계, 아동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 협의체와 지역단위 협의체, 아동돌봄서비스의 지역단위(시도 수준) 컨트롤타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각종 지원과 통합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 등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을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협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각 사업별 서비스 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각 사업 담당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각 사업별 이용자 현황과 사례 공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질적 수준을 맞추고 현재 배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행정전달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사업별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서울 P구의 초등돌봄교실 이용현황 자료

정익중, 김홍원, 길은배, 양애경, 양계민, 김광혁(2013).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2012).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2013),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인터넷 자료>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dreamstart.go.kr/>

<http://www.youthacademy.or.kr>

http://www.youthacademy.or.kr/new/05_academy/image/05_img01.jpg



토론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림 박사님의 발제문은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바탕 위에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생기는 서비스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고, 서비스 대상을 수급자 계층에 한정짓는 현재의 구도를 서비스 사각지대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처협의체의 구성과 지역에 아동돌봄서비스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드림스타트 연계 모형이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모형)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처간 칸막이'현상이 협의체와 컨트롤 타워만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의체, 컨트롤 타워 등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다른 영역에서도 여러 번 시도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위로부터 아래로'의 행정체계로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 조정을 꾀하는 방식에 너무 친숙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아동돌봄과 같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일수록 top-down 방식이 성공할 확률은 작다.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예산이 경직적으로 편성돼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체계에서는 서비스 연계와 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중앙에서 아동돌봄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해서 block grant 형식으로 지역으로 배정하고 지역에서 협의체가 그 예산을 학교-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 전달체계를 바꾸지 않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2. '아동돌봄서비스 중앙지원단'도 그런 맥락에서 효용이 있을까 의문이다. 대부분 이러한 '중앙지원단'은 그 자체가 예산 부족,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대상 인원도 적고, 프로그램의 개수도 적어 서비스 중복의 문제로까지 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문제의 핵심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이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부 체계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복지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둘 사이에 연계와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결국은 학교의 담장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서비스에 문호를 개방하고 학교를 세팅으로 한 돌봄서비스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담당 교사의 추가 근무시간 문제, 시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지역사회서비스 세팅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종래의 통상적인 사고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학교가 지역사회 아동서비스의 증추적인 역할을 하는 full-service school 등의 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의 문제가 너무 양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절대적 인원으로 보면 현재 서비스 공급 총량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돌봄 기능을 넘어 아동들의 전인적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형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동발달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아동돌봄서비스의 중요 기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의 인력구조와 예산으로 그러한 기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5.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는 모두 공급자 지원방식을 따르고 있다.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도 그러한 방식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재정지원 방식은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에서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바우처 방식을 통해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 것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아동돌봄서비스 정보센터'(가칭) 같은 곳이 서비스 중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론 2.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 다부처 관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홍승애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문제제기

-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가 증가하면서 돌봄의 사회적 지원은 영유아기 아동에서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취학전 돌봄에서 방과후 돌봄까지 대상연령층이 확장되고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시간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방과후 아동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생 328만명의 97만명(9.6%)이 방과후 1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나홀로 아동'으로 추산되고 있음. 또한 전국 초등학교생 중 12만명(3.7%)은 하루 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완전한 방임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현황

- 방과후 아동돌봄 정책의 목표: “방과후 보호와 돌봄”의 문제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사교육비 부담완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보완, 학교교육 이외의 공적 서비스 강화 등(정익중, 2011)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의 중복문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복문제, 부처간 사업별 격차, 부처간 연계 및 협업부재 등임.
- 대상의 중복문제: 3개 사업(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고학년의 일부를 포함한 유사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령의 중복성 뿐 아니라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 취약가족을 우선지원하고 있어서 저소득 빈곤아동, 청소년지원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다만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맞벌이가정 아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서비스 내용의 중복문제: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을 공통적인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 부처간 사업격차 문제: 사업규모나 특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의 보호라는 초기목적에서 시작되어 2003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어 사업 본격화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지원, 체계적인 운영지침,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문제 있음.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급속한 확산과정으로 인한 내실화 문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 200개소라는 한정된 서비스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음. 세 사업 중 초등돌봄교실사업이 예산 및 대상자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순임.
- 부처간 연계 및 협업 부족/부재: 사업간 중복과 단절, 연계 부족.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과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유와 연계 노력 필요
- 관점의 문제: 지금까지의 연계와 통합의 논의가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만 접근되었다면, 가족, 아동의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가족-노동시장-학교- 방과후돌봄”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및 돌봄과 부모의 돌봄(nonparental care)의 균형이 필요하며,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정책과 학교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표준화 필요: 기존사업의 연계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세 사업이 일정수준의 유사한 수준 및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능할 것이므로 서비스 표준화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역할 분담 안에서 중장기 방과후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긴급한 욕구를 표적화하고, 무엇을 서비스의 기본선으로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방과후돌봄사업지원단” 설립, “표준운영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적 돌봄서비스 기능강화를 통하여 일반계층으로 확대
- 서비스 연계방안: 연령별, 시간대별, 시설과 서비스의 연계방안 등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서 초등저학년을 주요대상, 일정연령이 초과되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 연결하는 방안 있음(연령별 연계방안).
 - 초등돌봄실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연결하는 방안.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학교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 이를 일정시간까지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일몰 후에는 아동들의 집과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여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특성을 살피서 ‘나홀로 아동’ 등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 청소년아카데미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에 의해 표적화된 서비스대상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특히 사례관리가 필요하거나 체험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연계하는 방안 등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학교는 학부모나 아동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고, 시설 인프라가 풍부한 장소이므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이 방안은 연계방식을 잘 구상하여 운영한다면 “사회적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시간/ 서비스 연계 방안).

- 서비스 대상자 확대: 공적돌봄 서비스 기능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층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선택도 다양함. 따라서 지역별로 방과후돌봄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시간, 이용연령, 이용자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돌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임.
-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돌봄통합위원회” 설치 필요: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방과후돌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필요함.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안”(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 2013.2.18.)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13.7.24.)